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설호영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526 |
|----------|-------|

제출년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설호영, 박태순, 김재국
최진호, 한명훈, 박은정
송바우나, 박은경, 선현우
유재수, 황은화, 이대구
이진분, 이해경, 현옥순
이지화, 최찬규, 김유숙
김진숙, 한갑수 의원(20인)

1. 주 문

-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118개소로 확대 운영 계획함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무시하고,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파악되지 않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경찰청의 일방적인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운영으로 최일선에서 주민의 치안을 지키는 파출소, 지구대가 통폐합되고 있으며, 안산시 또한 수암파출소가 부곡파출소와 통합되어 운영됨.
- 소규모지역관서의 경찰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집중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치안 공백을 야기하며, 주민의 불안감을 유발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의견청취가 필요함.

- 이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건의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치안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가운데 16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중심지역관서 제도(인접지구대·파출소 인력 통합 및 중심관서에 집중 운영)’를 시범 운영했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찰청의 낙관적인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심관서로 인력과 장비가 집중된 만큼 소규모 파출소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기능이 어렵고, 불꺼진 파출소를 보며 주민들은 치안공백을 마주할 수 밖에 없다.

파출소는 시민들 곁에 상주하며, 실질적인 현장대응을 하는 가장 밀접한 일선기관이다. 주변지역 파출소가 통합됨에 따라 중심관서에 의존해야 하며, 중심관서와 거리가 먼 지역은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불편과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경찰은 과거 이미 파출소 통합으로 지구대를 운영한 뒤 다시 환원시킨 유사한 ‘탄력유연파출소제도’와 ‘광역지구대’와 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번 ‘중심지역관서 제도’ 또한 탁상공론식 시책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에도 중심지구대에서도 흡수된 인력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반대의견 조차도 경찰청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강행하고 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산동을 24시간 관할하던 수암파출소가 소규모 관서로 지정, 부곡파출소와 통합돼 축소 운영되고 있다. 수암파출소가 위치한 곳은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취약지구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곳이며, 현재 공장과 다세대 주택,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경찰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스럽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졸속 강행으로 혼란과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불안감은 모두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며, 단순 범죄 발생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안산시의회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소규모지역관서(파출소·치안센터) 폐지를 전제로 하는 중심지역관서제의 확대 시행안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경찰청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라.

하나.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청원 및 의견을 모아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 9.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